

與·경제계 “제2의 노란봉투법” vs 野 “충실의무 확대 필요”

與 “이해관계 다른 주주의 이익 위한 충실의무 규정 자체가 논리적 모순”
野 “이사에 주주 보호의무 부과 취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났다.

경제단체도 반대 입장을 적극 펴고 있어 제2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홍식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불적분할 후 사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 책임 물을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대법원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회사의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제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란봉투법이 여당과 경제계의 반대에 힘입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은 것처럼, 상법 개정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법 상 주주충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천치라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침해 여지가 많다”며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내일 대국민 담화... “모든 사안 설명”

추경호, 국민소통 일찍 가져달라 제안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는 담화 돼야”
친윤계 “국면전환 위한 인적쇄신 지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각종 의혹,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록 등 최근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직접 논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집권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의 방식은 정해진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4일) 저녁 윤 대통령을 찾아가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인적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실 전면 인적 쇄신 및 쇄신 개각,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한 대표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앞줄 가운데)과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 두 번째),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오른쪽 세 번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與野, 예결위 이견... 예산심사 ‘치열’ 예상

與 “미래세대 부담 줄이기 위한 것”
野 “자멸적 긴축 재정... 악순환 고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치열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이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을 짚었다. 토론회에선 예결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9월2일 총수입 651조 8000억원,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억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같은 예산안을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

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감소된 세입에 따라 재정을 하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긴축 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러한 긴축 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자멸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구 의원은 “과거 70년 동안 약 600조원의 국가채무를 지켜왔다”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채무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변화하는 대외 여건과 경기 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구 의원은 “정부에서 가장 고민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尹 “4대개혁 완수해 자유·번영 길 열 것”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전례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4대 개혁을 완수해 도약을 이루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새마을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용병을 보내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절실하다”며 “새마을정신을 다시 일으켜 우리 앞의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다”면서도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수석비서관회의, 총리 주례회동에 이어 재차 4대 개혁 완수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